

韓·美 방산협력의 현재와 미래

안녕 하십니까?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본인의 마지막 한국 방문은 1988년 6월 한·미 안보협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문한 때였습니다. 한·미간의 방위협력에 신기원을 이룩한 방위산업 기술협력 양해각서가 서명된 것도 바로 이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미간에 전개되고 있는 방산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양국간에 이미 전개되고 있고 계속 발전될 특수한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미 국방부의 전반적인軍備협력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군비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미국 행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장려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1950~1960년대에는 주로 美製장비의 판매와 공동생산이었으며, 예를 들면 F-104기, 호크, M113 장갑차 등의 공동생산이었습니다. 초기의 협력활동은 대부분 나토 맹방들과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나토내에 협력을 촉진할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군비이사회이며, 연간 2회의 모임을 갖고 나토국가간 국제방위협력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중추기관입니다. 나토국가간의 방위협력은 기초연구로부터 생산과 군수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초까지 미국의 한국과의 방위협력도 나토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바, 미국의 대외원조와 미국장비의 판매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광범위한 미국장비를 대량 공동생산, 사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과 연구개발 분야의 과학기술 자료교환협정체결에도 미국의 지원이 컸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 국방부는 의회의 입법과 축구를 받게됨에 따라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더 많은 협력을 실시하고 생산과 군수지원단계까지 계속 협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내지는 후반에 미국과 대부분의 나토맹방들이 서명한 쌍무양해각서와 외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미 의회가 예산사용을 승인한 조치는 미국이 나토뿐만 아닌 전세계 맹방들과 보다 많은 협력을 실시할 것임을 말하여 주는 미국정부의 정책이며, 장려사항이고 방향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방위력강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무렵인 1985년에 미 의회는 미 국방부가 나토와 방위협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또 하나의 중요한 장려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넌(Nunn) 수정안으로서 미국과 나토 맹방들간의 공동연구개발에 1억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년수정안에 의하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동맹국들과 공동개발 가능성을 먼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6년 공동개발을 위한 이 새로운 장려정책은 한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및 이집트도 참여할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의하여 나토 주요동맹국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 년修正案이 장차 한·미간의 방위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리라 믿고 좀 더 상세히 토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년 수정안과 관련된 미국의 대부분 활동은 다른 나토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새로운 공동연구개발사업이 25건이상 승인된바 있

습니다.

미 국방부의 관점에서 보면 년수정안에 의한 사업이야말로 신속하게 시작할수 있고 개발소요자금을 절약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백억불 이상의 미국과 나토동맹국들간의 년수정안에 따른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에서 관련국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년사업에 대한 미국의 분담액은 30억불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30억불만 분담함으로써 개발사업에서 1백억불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개별 국가별 기준으로 볼때 더 많은 액수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말씀은 최근 각 軍省과 軍 기관에 하달된 美 국방장관의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1994년까지 국방부의 연구개발예산중 최소한 10%는 공동연구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각 軍省과 국방관련기관들(국방개발사업처, 국방통신처등)은 이 지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은 미 국방부가 보다 많은 방산협력 기회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도 역시 보호주의적 관점을 대변하는 몇가지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동개발품목의 제3국 판매에 대한 제약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약은 모든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제3국 판매정책이 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산적인 사고와 계획이 미국과 협력국가간에 더욱 증대되어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전 규제나 정책들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실의 과학자문위원으로 3년반을 재직하는 동안 본인은 나토나 한·미



● Everett D. Greinke

前 美 국방부 부차관

연합사에서 재래식 전쟁역지력을 강력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맹방간에 최상급 기술의 공유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FSX기의 공동개발을 두고 벌어진 최근의 논란은 협력국가간의 모든 관련기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을때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이 발생할수 있는 오해의 본보기입니다.

본인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계획(KFP)을 앞두고 한국의 관련업체나 정부 기관에서 미국의 각종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승인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와 의회등이 이러한 대상기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관련요원들에게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측 견해가 필요한 의문에 대답해주는 등으로 지원해주는 한국측 대행기관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군비협력을 계속 제약하게 될 또 다른 사항으로서는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방산협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과도한 군비협력이 방산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이 점은 미국방부, 의회, 기타 정부 부처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제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넓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산협력을 전개한다면 미국의 방산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방산협력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제약외에도 미국법에 의해 외국에서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밀 볼베어링 및 섬유에서 앵커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미국방부에서 동맹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제약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調達源으로부터만 획득할 수 있는 품목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방산협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과 국제 군비협력을 할 때 이와 유사한 장려책이나 제한조치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비협력활동과 그 양면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방산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정부는 물론, 특히 중요한 것은 양국의 해당업체들간의 폭넓은 상호이해와 고된 작업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미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은 필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양국간 성공적인 방산협력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방산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정

부와 업체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노력을 경주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미래로 이야기를 돌려 한·미간의 방산협력을 증진시키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효과적인 정부對 정부간의 조정기구나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미 방산기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에서 생산 및 군수지원에 이르기까지 방산활동의 모든 단계가 양측의 조직구성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부서의 요원들이 협조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회의는 최소 년 1회,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협력절차나 정책이 확정되고 검토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형태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 정부내 여러 방산관련기관에서 협력활동을 위한 굳건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회의를 통해 한·미 방산업체에 협력의 우선사항과 그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개최된 韓·美 防産會議은 업체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부간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방산업체에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미 방산회의는 양국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산협력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업체간의 긴밀한 상호관계와 협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방산기술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발전됨에 따라 양국간 협력활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한·미 방산협력이 몇몇 공동생산계획과 더불어 응용연구나 탐색개발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방산업체는 우수한

생산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간 시스템 개발분야에서는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대 정부 또는 한 업체 대 업체간 활동의 일환으로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양국의 軍이 힘을 합쳐 각기 우선적인 작전요구 소요와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양국의 군 운영자들이 지지할수 있는 소요장비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서를 도출하는 것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Senior National Representatives」를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Senior National Representatives」는 육·해·공군의 少將이나 中將級 將星들중 연구·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들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회합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소요, 계획, 일정 등에 관한 토의를 하고 협력사업을 위한 예비 협정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본인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공동소요를 제기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연합사에서 제기하는 공동작전 요구소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특별한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양국의 소요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강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국간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방산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개발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공동소요의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산기술 협력회의의 주요 위원뿐만 아니라 「Senior National Representatives」도 이러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년資金은 육·해·공군으로 하여금 나토 맹방이나 非나토 주요동맹국들과 함께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호 유익한 개발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측의 이러한 인센티브를 이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미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美 군사지원단의 방위협력실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기관으로서, 한국의 정부와 업체는 협력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 기관을 일상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 및 업체들도 이곳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산장비의 생산면에서의 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미 국방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조달협정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미국이 나토맹방들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호혜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관계를 성립시킬수 있는 훌륭한 시발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양국 업체의 직접적인 제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방산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업체들과 일하여 봄으로써 미국의 방산조달절차나 광범위한 규정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방산회의는 상대방의 방산조달 요건과 절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의 상대업체가 직접 만나 가능한 협동사업에 관해 논의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은 최근 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大宇가 Lockheed사의 P-7 항공기날개 대량생산 계약에

성공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개 경쟁이었으며, 한국의 업체가 품질이나 비용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과의 협동하는 등의 장점도 고려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상대방의 경쟁력있는 장점을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자유진영에서 방위예산을 삭감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방산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방국과의 협력이나 방산장비 개발비용의 분담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NATO국가나 태평양지역 우방국가들과 무기체계를 공동생산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EC 국가간에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92년의 유럽경제공동체는 유럽의 방위시장 참여를 EC

국가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EC의 경제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나토의 방위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2년의 EC통합에 따라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EC내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입니다.

EC내에서 이러한 준비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업체들은 태평양지역이 우리의 가장 큰 교역시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태평양지역 국가의 업체들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산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야 할일이 많지만,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일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요한 우방이며, 방산협력의 세계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전진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장래 여러분과 같이 일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E. D. Greinke 前 美 국무부 차관과의 對談

삼성물산 박태진 이사 : 연설중에도 상호조달협정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지난 7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상호조달협정은 계속 검토사항으로 유보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은 나토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이집트등과는 유사한 협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막대한 양의 장비를 외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미 국방부 조달참여에 관한한 비자격국가로 분류하여 차별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장차 한·미간의 상호조달협정 체결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라인케 : 미국과 한국이 방산기술협정 체결을 협의할 당시부터 본인은 미국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미국이 나토와 체결한 것과 같은 상호조달협정과 비슷한 것을 한국과 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의 방위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한국도 미국의 조달규정이나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뒤로 미루고, 현재 미국이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의 이해부족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앞으로 1~2년, 아니면 3년정도에 걸쳐 양국의 법체제나 규제상태에 관해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상호조달협정 체결에 이를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호조달협정 체결이야말로 양국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대우 김성기 상무 : 연사께서는 한·미 방산협력이 과거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고,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양국의 실무진이 조달절차나 구매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비롯한 동료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노력하며, 근본적인 방위협력의 철학을 정립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그라인케 : 본인도 표현만 달랐지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정부나 방산업체는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서로를 배워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간의 방산협력이나 방산물자 판매와 관련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지금 현재 일을 해결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90%의 방산물자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현재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설중에 언급한 Nunn수정안은 아주 훌륭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호혜성을 갖고 있고 한·미 양국에 이익을 줄수 있는 좋은 수정안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의 방산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이 워싱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은 물론 양국간의 토의절차에 참여하여, 미국측에서 정치·산업적으로 한국측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한·미 방산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측의 견해를 잘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진흥회 柳俊馨 상근부회장 : 작년 8월에 美 국방과학위원회(DSB)의 커리 박사 일행이 태평양연안국가의 방산협력방안을 Survey하였고, 한국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커리 박사도 태평양지역의 경제·안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술이전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커리 박사 일행은 방문결과를 정리하여 미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라인케 : 커리 박사는 2주전쯤에 美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아세안국가, 중국, 일본 및 한국이 해당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대만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외에는 미국이 태평양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방산협력을 할 것을 종용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야기 할 수는 없고 한가지를 발췌하면, 미국이 과거 나토에서 한 것처럼 방산협력을 그룹으로 대하지 말고 국가별로 대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양국 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외 많은 철학은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이를 본인이 아는 것은 본인이 커리 박사의 스폰서였고, 타스크포스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이 美 국방부에 개인적으로 보고한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